

# ‘명예훼손’ 둘러싼 법리논쟁 치열할듯

■ 5·18역사왜곡 검찰수사 어떻게 되나

## 광주지검 직접 수사·주소지 이관 검토

## 추가 고소·민사 소송 등 장기화 가능성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지난 7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비하한 종합편성채널과 탈북자, 일간베스트 저자소(일베) 등 10명을 광주지검에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검찰이 고소장 검토에 착수했다.

검찰은 우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의견을 묻은 뒤 고소장이 접수된 광주지검이 직접 수사할 지 아니면 피

고소인 주소지의 지검으로 이관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명예훼손을 둘러싼 법리논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 및 5·18 관련자 31명과 5·18 기념재단·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 4개 5·18 관련단체를 포함해 35명(단체)을 고소인으

로 한 고소장이 민원실로 접수돼 사건 배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이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예정이어서 조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출석 횟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조사 당사자인 피고소인의 주소지에 고소·고발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고소인 측은 광주지검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인 강성두 변호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공방이 벌어질 때 고령인 유족이나 피해자가 해당 지역까지 오가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피고소인보다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한 고소인의 입장을 더 고려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왜곡 대책위는 또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고소, 민사 소송 등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법정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본 뒤 수사할 지 아니면 이관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정충원 국무총리는 10일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 “역사를 왜곡하는 반사회적인 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고, 이에 대해선 광주지검에 고발돼 수사 중인 걸로 알고 때문에 결과가 밝혀지리라 본다”며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민주당 원내현원이 ‘5·18 왜곡’으로 논란을 일으킨 보수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게재된 글을 열거하며 “이런 패륜행위를 버짓이 하는데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총리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낸 종합편성채널 보도 내용과 관련, “북한군이 개입 안 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임 의원이 박승춘 보존처장의 해임을 요구하자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해임 건의의 대상이 아님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새누리 광주시·전남도당 개편대회

내달 5일까지 시·도당위원장 선출

새누리당은 호남지역 시·도당 개편대회를 다음달 5일까지 치러 새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수택 최고위원이 전했다.

전국의 새누리당 현 시·도당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8월 끝나며 다른 지역 시·도당개편대회는 오는 21일까지 마치기로 한 상황이며 호남의 경우 시·도당위원장을 또다시 지명으로 결정할지 아니면 경선으로 할지를 두고 새누리

당 내부에서 논란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 유 최고위원은 “호남지역이라고 지명직 시·도당위원장이 계속할 수는 없다. 당이 살려면 시·도당부터 활성화되고 그러려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며 경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후보자 신청을 받고 경선을 원칙으로 새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할 것”이라며 “하지만, 후보자 간 합의를 통해 추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6월항쟁 현대사 물줄기 바꾼 분수령”

### 박대통령 6·10항쟁 기념사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제26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1987년 6월은 우리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분수령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그날, 거리를 가득 메웠던 순수한 열정과 정신이야말로 소중하고 값진 민주주의의 자산”이라며 “정부는 6월 항쟁의 고귀한 정신과 가치를 이어받아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이제는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그 가치를 더욱 확장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골을 메워서 국민 화합의 꽃을 피우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민주주의 영역을 경제 분야까지도 확장해 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고, 팍팍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6월 항쟁의 정신을 높이 평가하면서 정치 민주주의를 토대로 경제민주화 실현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6월 정신’의 계승방향을 놓고 새누리당은 국민대통합을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전두환 추징법’의 국회 통과를 내세우며 차이를 보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대통령 “세금으로 박정희 공원 조성 바람직하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서울 중구청이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았던 신당동 가옥 일대에 기념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서울 중구청이 신당동 옛 사저 일대를 기념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국가경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국민 세금을 들여 기념공원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물론 해당 지자체에서는 관광자원 확보를 비롯해 여

러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자금을 들여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방문해서 마음으로 기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점을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침체한 논쟁이 있는 사안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도 중구청은 사업을 강행해 박 전 대통령을 미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개념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 靑 민정수석 ‘국정원 사건’ 개입 의혹

민주 신경민 의원 제기...곽상도 수석 “사실 무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일선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국정원 고위 간부들이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이 불거진 이후 김용관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민정수석은 “(통화의) 요지는 너희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지방경찰청장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민정수석은 “(통화의) 요지는 너희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지방경찰청장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민정수석은 “(통화의) 요지는 너희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지방경찰청장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사한 검사들의 회식 자리에 곽 수석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다”며 “휴대전화 소리가 커서 모든 참석자들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통화의) 요지는 너희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지방경찰청장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저는 모르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또 “(대선을 앞두고 여직원 댓글 사건이) 역삼동(오피스텔)에서 벌어졌을 당시 국정원 2차장 산하에서 일하는 하모 단장, 신모 실장이 경찰과 업무협조를 했는데 잘 안됐다. 경찰이 말을 안 들은 모양”이라며 “그랬더니 상관인 박모 국장이 나서 김 전 청장과 함께 일하고 항상 연락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국장은) 하 단장, 신 실장에게 동물의 이름 대며 ‘XX, 너희들 이따위도 못하고 국정원 직원이나고 힐난했다’고 말했다.

이에 황 장관은 “저는 모르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황 장관이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하자 신 의원은 “사건 직후 박 국장이 모든 연락을 책임지고 김 전 청장과 직거래를 시작하다 12월16일 (대선후보 간) TV토론으로 박 국장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자 차분히 2차장이 직접 나섰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황 장관은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적절하게 처리하고 적절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겠다”고만 밝혔다.

이에 대해 곽상도 수석은 “신 의원의 발언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팩트 자체가 사실 무근이다”고 말했다고 김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3년 10월 01일  
**굿모닝 메디컬 타운**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에 탄생합니다!

**굿모닝 스포테인먼트 타운**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